

야권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총력 대응

민주, 서명운동·캠페인 전개
방일 기간 광화문서 규탄집회
정의 “尹, 국민투표 실시하라”
서울대민교협 “일방적 해법 불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14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철회시키기 위해 전국 단위 규탄대회 개최와 전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대응을 위한 ‘집중행동 주간’을 지정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주말 전국 단위 규탄대회 개최 방침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도, 국민도 반대하는 안”이라며 “전범 기업 책임은 면제하고 우리 민간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건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굴욕적으로 한낱한 해법을 통해 일본에서 뭘 받아오겠단 건지 답답하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약속 불이행 등 한일 관계 뇌관 이산적해 있다. 더 이상 굴욕 외교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소속 유정주(가운데) 의원이 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8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도심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위원회는 “민주당 시·도당별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를 구성해 당원 총동원 주말 규탄대회, 피켓시위 등 전국 단위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국 주요 거점에서 출퇴근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겠다.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당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강력히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방일 직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을 열고, 방일 기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박진 외교 장관이 컵에 물이 반이 찼다고 했다. 나머지 반은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채울 것이다. 사도광산이나 군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채울 것이고 군국주의로 채울 것이다. 재무장으로 채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등 법안도 준비 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입법적 조치를 연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제 강제동원과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해법, 조치는 대통령 독단으로 강행돼선 안 된다”며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우리 헌법 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규정한다”며

“이번 조치는 3·1 운동 계승이란 헌법 정신을 부정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해소해 제2의 을사늑약, 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이번 해법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직을 걸고 국민투표 하라”며 “윤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민교협)도 이날 ‘제3자 변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해법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는 결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이대로 간다면 한일관계는 장기적으로 더 악화되고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편입되어 대한민국의 자주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TF 단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공천제도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공천률 3월 성안, 4월 말 특별당규 제정”

“21대 준용, 혁신위 안 일부 참고”
“원외·청년·여성 의견도 수렴할 것”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는 14일 내년 총선 공천률을 21대 방식을 준용해 이달 말께 성안, 의원총회와 권리당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월 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간사는 이날 첫 TF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운영 방향과 관련, “전체 체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3월 말에 TF안을 확정해 4월 첫 주당 내 의견 수렴, 최고위 보고, 의총 보고를 하

려 한다”고 말했다.

문 간사는 “4월 둘째 주엔 TF단장이 자간담회를 열고 특별당규 제정안을 의결 및 발의할 것”이라며 “권리당원 의견 수렴 절차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넷째 주엔 권리 당원 50%와 중앙위원 50% 투표를 통해 특별당규를 제정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률 기준에 관련해서, “21대를 준용해 22대 료를 확정하고, 혁신위안도 일부 참고하는 것으로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외와 청년, 여성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며 “청년, 여성 의견

은 민주연구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내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판단 기준은 경쟁력에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 역시 당의 하나 된 단결된 힘”이라며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결집력을 높이고 총선 승리 주춧돌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촉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14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방문해 전국혁신도시 회원도시들의 입장을 전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나 원도심의 활성화 계기로 이용된다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온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방 불균형은 심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현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원도심과 이를 잇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발전하

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원도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30일 우석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긴급 임시회를 열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공동 목표 달성, 상호 협력을 위해 2006년 12월 혁신도시 지역 11개 기초지자체로 설립됐다.

현 15기 임원은 회장에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부회장에 조병욱 충북 음성군수와 윤병태 제주시장이자 **최황지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尹, 16~17일 日 실무방문... 기시다와 정상회담

대통령실 “한일 관계 정상화 의미”
동포 오찬·日친선단체 접견 등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 방문해 첫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방일 일정과 의의, 기대 등을 밝혔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을 16~17일 실무 방문하며, 이번 방문은 12년 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 재개로 윤 정부 출범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도쿄 도착후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오후에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일 이틀째인 17일 오전에는 한일 교류를 지원하는 일본의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입법부 간 교류 단체인 한일 의원연맹과 민간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아소 다로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일 주요 경제인과 오찬을 겸한 ‘한일 경제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민간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양국 경제계가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일정으로 게이오대학에서 일본인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미래세대 대상 강연회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강연 후 늦은 오후에 귀국

길에 오른다. 이번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만남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은 경색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본격 진입하는 의미”라며 “양 정상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의 정상화 방안과 다양한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방일의 의의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 발표와 기시다 총리 답방 여부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언제 방한할 지는 정상회담을 해봐야 알 것”이라며 “두 지도자간 개인적 신뢰를 봤을 때 서틀외교가 정상은 물론 고위급 장차관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며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인들에 공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